

제주新보

HOME > 정치/행정 > 제주도정

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해상풍력발전 조성 '물꼬'

윤 김정은 기자 ㉠ 승인 2020.06.02

주민 간 반대 난항격다 올해 초 협의 완료
해수역 개발 가능 여부 타당성 용역 앞뒀



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조성 계획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.

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지원으로 주민과 민군간 화합과 상생,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5787억원 등 초예산 962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.

39개 사업이 수립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,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등 9개 사업은 1008억원이 투입돼 완료됐고, 25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.

나머지 5개 사업은 유보됐다.

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보된 사업의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,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.

유보된 사업 중 1580억원 규모의 지열발전 사업은 안정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대체가 필요했다.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주민 간 입장차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.

하지만 올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 마을회와 어촌계간 협의를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.

발전규모는 22MW(5.5MW×4기)로 사업비는 1207억원이다.

제주도에 따르면 마을 주민과 제주도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, 제주도저탄소정책과가 머리를 맞대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,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일대 해수역이 개발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앞두고 있다.

다만 대체된 사업 중 강정~월평 해안도로 개설 사업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, 나머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도 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또 다른 사업을 발굴중에 있다.

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“마을 주민이 원하고,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2차 사업계획을 변경해 확정하겠다”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제주新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정은 기자